

강주호 “일회적·일시적 악성민원

〈교총 신임회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 대응”

취임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에 발의·입법 요청 국회 교육위에 개정 요구 전달 예정 현재 반복성 이유로 면죄부 받기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회적·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시해 구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 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

으로 ‘목적적·일시적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에 연구목적이란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이 있다”라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정 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고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그러나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 ‘이중등록’ 금지… 총원 합격 시 주의

대교협 등록 기준 ‘등록금 납부 여부’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취소 인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박시현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한 A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뒤 가장 원했던 B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두 대학에 등록한 셈이다. 이래도 될까?

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총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된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금지돼 있다.

간혹 수험생들이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만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이다. 이미 등록한 대학에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대교협은 이중 등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중등록은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중 등록으로 인해 총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특히 총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르게 등록 포기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중 등록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입학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건강관리교실’ 개발

SKT 등 AI 전문기업과 협력 3월부터 운영 내실화 사례 연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및 미래 지향적인 건강관리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SK텔레콤 등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협력 개발한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을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신체건강·영양·정서건강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다.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건강체력교실’의 내실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신체 정보 및 체력 측정 ▲신체적 건강관리 ▲정서적 건강관리 ▲사회적 건강관리 ▲영양 관리 등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각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 각 학교가 예산과 공간 등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고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체력 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283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총 145억원을 지원해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도 총 31개교에 디지털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총 11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축이 완료된 학교나 신규 구축 예정 학교 중 1곳을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 적용 시범 학교로 지정해 3월부터 건강체력교실 운영 내실화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평택시,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 1위

(인구 50만 이상)

4110명 집계… 전년비 10.8% 늘어

평택시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에 따르면 평택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3년보다 10.8% 증가한 411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에서는 평택시에 이어 ▲경기 수원시(9.0%) ▲경기 화성시(7.4%) ▲경기 안양시(6.7%) ▲경기 파주시(5.1%) ▲경기 용인시(4.8%) ▲경기 성남시(4.5%) ▲경기 남양주시(3.2%) ▲경기 시흥시(2.7%) ▲경기 고양시(2.7%) ▲경남 창원시(0.8%) ▲충북 청주시(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는 3.1%의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했다.

높은 출생아 증가율과 관련해 평택시는 취업자 수, 젊은 층의 유입, 주택 보급, 높은 혼인율 등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했다.

실제 평택시의 취업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평균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45.3세)과 경기도(43.6세)보다 낮은 41.9세를 기록했다. 특히 평택 고덕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33.1세로, 수도권 읍면동 중 가장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년 동안(2018~2023년) 주택 수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으며, 2019년 평택시가 대도시로 진입한 이후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초혼인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규제 철폐안 3·4호 발표

서울시는 규제 철폐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하는데 이어 나흘 만에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철폐 3호와 관련해 시는 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9일 열린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 규제

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설정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규제 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울진군과 크골프장, 공인경기장 인증 획득

시설·운영적 우수성 인정받아

울진군은 울진파크골프장(36홀)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경기장으로 지난 연말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협회와 함께 공인인증 검증 조건에 맞추어 시설물 보완공사 등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공인 경기장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 자격요건에 충족하게 됐다.

이번 공인인증은 울진파크골프장이 시설적, 운영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 부대시설, 시설 용품의 공인 규격 부합 여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울진파크골프장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



울진군은 지난 12월 울진파크골프장(36홀)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경기장으로 인증받았다.

는 시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파크골프는 최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종목이다. 울진파크골프장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4만6000㎡의 넓은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청정 동해 바다와 양귀천의 자연경관 속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울진(울산)=손기섭 기자 gbnews8082@